

Japan Weekly Digest

2012. 6. 23 ~ 2012. 6. 29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소비세 증세법안 중의원 통과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재생가능에너지 매입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급증
- 동경전력의 국유화 결정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소비세 증세법안 중의원 통과

- 소비세 증세법안을 비롯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관련 법안이 26일 중의원을 통과
 -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, 사회보장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
 - 증세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경기대책 등 세출 증가 압력도 내재하고 있어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지배적임
- 그러나 이번 소비세 인상은 1997년 4월 이후 17년만으로 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로 현역 세대나 젊은 세대의 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 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□ 이번 통과된 법안의 내용

- 이번에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관련 다음 8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중 ①~③, 6개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을 수정, ④~⑤ 2개 법안은 민·자·공 3당이 제출한 의원입법임
 - ① 소비세율 증세 관련 2개 법안 :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%, 2015년 10월에 10%로 인상
 - ② 양육 지원 관련 2개 법안 : 유치원과 보육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보육 확충
 - ③ 연금제도 개혁 관련 2개 법안 : 수급자격 기간 단축,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일원화
 - ④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 법안 : 초당적인 기구로 국민회의를 창설, 학계 전문가도 포함시켜 협의
 - ⑤ 인정 유아원법 개정 : 유아원·보육원의 기능을 겸비한 현행 제도를 확충

□ 사회보장 지출 증가, 재정건전화에 제동 요인

- 일본정부는 명목 GDP에 대한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도에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
 - 소비세율을 10%까지 인상하더라도 수지균형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세로만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16%까지 인상해야함
-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을 표방하면서 사회보장개혁은 많은 부분이 유보
 -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토록 하겠다고 천명했으나, 증세 선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

- 후생성 추계에 의하면 사회보장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과 보험료 총액은 2025년도에 146.2조엔으로 고령화에 따라 금년보다도 45조엔(40%) 이상이나 증가한다는 계산
- 사회보장지출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당초 정부안은 고소득층의 연금을 감축하는 대신, 그 감축분의 일부를 저소득층의 연금에 가산시키는 내용이었으나, 이번 통과된 법안에서는 고소득층의 연금감액 부분이 삭제됨
- 또한 의료분야는 당초법안에서 원래 20%인 70~74세의 자기부담률을 매년 10%로 억제하는 예산조치를 철회키로 했는데 이 역시 불투명하게 되었음

□ 안정적인 사회보장 장치 구축이 중요한 과제

- 안정적인 사회보장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데 현행 연금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율이 40%를 초과한 상태로 그 지속성에 대해 의문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
- 민주당은 정권공약으로 최저보장연금 창설 등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으나, 이에 대해서도 신설될 「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」에서 다루기로 함

□ 세출 증가 압력

-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경기대책의 필요성을 주장, 소비세 증세법안 부칙으로 성장전략이나 방재분야에 대한 투자방침을 반영시킴
- 자민당은 부흥투자를 중심축으로 한 「국토강인화기본법」을 마련, 3년간 15조엔의 집중투자를 계획
- 소비세 증세를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면, 최우선 목표인 재정건전화 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됨. 사회보장지출의 효율화를 방치한 채로 증세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일본경제의 활력을 잠식할 뿐이라는 것
- 따라서 어디까지나 규제개혁을 마중물로 하여 성장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

□ 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빠르면 8월 초 성립

-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법안은 민·자·공 3당 공조체제가 흔들지 않으면 8월 초순에 압도적인 다수찬성으로 성립될 전망이다, 노다 총리도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마감일인 9월 8일까지 성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표명
- 그러나 민주당은 간판공약인 최저보장연금 창설이 사실상 철회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이 상실과 당내 분열 등으로 중의원 해산은 피할 수 없는 상황
-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비증세 법안 성립 후 또는 적자국채 발행법안 성립 후 야당과의 협의 해산, 야당의 내각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해산 모두 가능함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재생가능에너지 매입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급증

- 7월 1일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 시행을 계기로 메가솔라(출력 1MW=1000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)의 신규 사업계획이 총 200만KW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
- 이는 발전능력 면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분에 상당하며, 메가 솔라와 풍력을 합한 발전능력은 60%이상 증가하게 되나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기 요금을 인상시킬 우려도 있음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전력부족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 -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력코스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신에너지 기본계획에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
- 7월 이후 발전 사업은 메가 솔라 계획이 110건 이상으로 합계 130만KW, 풍력발전이 약 20건으로 약 75만KW에 달함
 - 건설비는(토지대금 제외)총 6천억엔 이상이 될 전망. 메가 솔라는 2014년도까지, 풍력은 2016년도까지 각각 가동될 예정
- 전량 매입제도는 태양광, 풍력, 지열, 중소수력, 바이오매스가 대상으로, 발전 코스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임
 - 일본의 지열자원은 풍부한 편이나,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핵심을 담당
- 매입가격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태양광이 KW당 42엔, 발전능력 20KW이상 풍력은 23.1엔. 발전비용에 적정이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메가 솔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일본태양광발전협회는 전망하고 있음
 - NTT는 치바에 총 6만 KW규모로, 교세라도 가고시마에 7만 KW규모를 계획
 - 풍력발전분야의 일본최대기업인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와카야마에 2016년까지 총 30만KW의 발전소 건설계획
 - 지역별로는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이 많은 홋카이도와 도후쿠지역의 신설 풍력이 약 47만KW로 전체의 60%. 한편 메가 솔라 분야에서는 일조량이 많은 규슈지역이 총 20만KW 건설계획

- 경제산업성은 메가 솔라 등 비주택용 태양광발전은 2011년 시점에서 80만 KW, 풍력이 250만KW로 추계. 이번 제도 도입으로 메가 솔라는 2.6배 증가
- 일본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KW당 0.22엔만큼 매입가격이 상승, 일반가정(전력 요금 월 7천엔)의 전국 평균부담증가액은 월 87엔
 - 전력 10개사 전력량을 합쳐 산출하면, 소비자나 기업의 부담증가 총액은 약 2 천억엔.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가속되면 매입가액도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나 기업의 전력요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

□ 동경전력의 국유화 결정

- 국유화의 마지막 관문인 실질 국유화에 필요한 정관변경 등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동경전력의 실질적인 국유화가 결정됨
 - 최대 초점인 발행가능 주식수를 늘리는 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1조엔의 자본주입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동경전력은 실질 국유화 상태에서 경영개혁이나 배상작업 등을 추진하게 됨
- 그러나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음
 - 첫째, 공적자금 주입은 동경전력에서 제출한 ‘종합특별사업계획’의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 인상임. 그러나 동경전력의 경비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시되어 예정대로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
 - 기업과 가정에 전기요금인상에 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제시된 10년간 3.2조엔의 경비절감 목표를 상회하는 합리화 노력이 필요함
 - 이를 위해서는 화력연료, 송배전 등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컴패니제도를 신속히 도입, 조직의 낭비를 줄여야 함
 - 둘째, 경영의 투명도로 동경전력의 최대주주인 동경도에서는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경영정보의 상세한 공시를 정관에 명기토록 요구했지만 이 제안은 부결되었음
 - 셋째, 가시와자키가리와(柏崎刈羽)원전의 재가동으로 재가동을 위한 안전기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원전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주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다는 점임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오사카가스	2012.6.23	셀가스	미국/카보트오 일엔가스	직접투자/권익 취득가, 취득가액 약 200억엔
도요타자동차	2012.6.25	자동차	독일/BMW	기술제휴/도요타가 BMW에 HV 및 연료전지차 기술 공여
토요시마	2012.6.25	자동차부품	브라질	직접투자/포크리프트용 자동차부품의 현지생산
닛산자동차	2012.6.25	자동차	중국/동풍기차 집단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투자 규모 50억엔, 연산 15만대
모리정기제작소	2012.6.26	공작기계	독일/길데마이 스터	판매제휴/세계 영업거점 완전 통합 및 판매·서비스체제 강화
마루베니	2012.6.26	수산물 유통	네델란드/웰마 유로파	직접투자/85%주식을 약 11억 엔에 취득,
리코	2012.6.26	IT	독일/ADA다스 시스템하우스	직접투자/IT사업 매수
미쯔이물산	2012.6.27	유전개발	영국/북해유전	직접투자/권익의 일부 취득, 취득가액 약 224억엔
정관농기	2012.6.27	농업기계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연산 1만개 규모의 트랙터생산공장 설립, 취득가액 약 20억엔
IHIMU (IHI자회사)	2012.6.28	조선	브라질/에트라 치코솔조선소	기술제휴/기술지원, 설계기술자 30명 파견
스즈키	2012.6.29	자동차	인도·인도네시아	직접투자/2016년까지 2000억엔
이스즈	2012.6.29	자동차	중국/경령기차 그룹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투자규모 96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- (1) 『재생가능에너지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검토』 신금중앙금고 지역·중소기업 연구소, 6월23일

*출처: <http://www.scbri.jp/PDFnews&topics/20120622.pdf>

- (2) 『2012년판 방재백서』 내각부, 6월26일

*출처: <http://www.bousai.go.jp/hakusho/hakusho.html>

- (3) 『2030년까지 일본경제의 중기전망』, 전력중앙연구소, 6월26일

*출처: <http://cripi.denken.or.jp/jp/kenkikaku/report/download/pwAF2zSq635nZCRH36ZdMQHF2fTzX78G/report.pdf>

- (4) 『신성장전략시리즈 : 일본재생을 위해 성장전략에 요구되는 관점』, 일본종합연구소, 6월28일

*출처: <http://www3.keizaireport.com/report.php/RID/161818/>

- (5) 『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개요와 과제』 농림중금종합연구소, 6월28일

*출처: <http://www.nochuri.co.jp/report/pdf/f1207ar3.pdf>

- (6) 『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코퍼레이트거버넌스』 경제산업연구소, 6월29일

*출처 : 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bbl/12052901.html>

- (7) 『일본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경쟁력 강화책 : 산업구조심의회, 무역경제협력 분과회 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6월29일
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4685/pdf/report01_01_00.pdf